

# 미중카르텔: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



박 홍 서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소

“미국이 위챗을 금지한다면, 중국도 아이폰과 애플 제품을 쓸 이유가 없다.” 2020년 8월 28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됐다.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이 글을 ‘아이폰’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 시 공안 당국과 공산당 신장 선전부에 감사를 표한다.”

최근 개봉된 미 할리우드 영화 ‘물란’의 엔딩 크레딧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영화 촬영지였던 신장 위구르 공안 당국에 대한 감사의 말이었다. 현재 미국이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억압 정책을 강경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마치 이런 상황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하다고 그것이 파국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갈등과 파국은 별개의 문제일 뿐이다. 미중 간 패권전쟁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핵무기와 같은 물리적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 그래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양국이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국이라는 사실이 있다. 미국은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만들었고, 개혁개방기 중국은 그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편승해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마오쩌둥식 ‘자력갱생’ 식 발전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하는 것만큼 이를 반증하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 왜 카르텔인가?

미중 양국이 서로 전쟁할 수 없다면, 그리고 모두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충실한 구성국이라면

---

양국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카르텔의 속성을 보이지 않을까? 양국이 정교한 로드맵에 따라 카르텔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든 미중관계의 '구조'가 카르텔의 속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담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유경쟁은 빈번하게 제 살을 깎아 먹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카르텔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통제한다.

국제정치도 크게 다르다 볼 수 없다. 국제정치의 거대기업인 강대국들은 서로 전쟁을 불사하기보다는 담합해 세력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 오히려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카르텔을 차단할 상위 정부가 없기 때문에 강대국 간 카르텔이 공식화되기까지 한다. 19세기 유럽협조체제나 20세기 초 워싱턴 체제, 그리고 20세기 후반 알타체제는 그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국제정치의 카르텔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 구성국 중 누구라도 애초의 담합을 깨고 일방적 행동을 한다면 카르텔은 붕괴된다. 그런 상황은 보통 한 국가가 타국의 세력권을 침범할 때 발생한다. '백년 평화'를 자랑하던 유럽협조체제가 독일의 팽창으로 붕괴되고, 워싱턴 체제가 일본의 팽창으로 종결된 상황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유럽협조체제나 워싱턴 체제보다는 미소 알타체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핵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만큼 상호 전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게다가 미중관계는 미소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결합돼 있다. 미중 간 상호의존은 1차 대전 직전 유럽 각국의 상호의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당시 유럽 열강은 모두 제조업 강국이었고 시장개척을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참여한 경쟁을 벌였다. 그에 비해 현재의 미중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우선, 상호 간 주요 수출 품목 자체가 다르다. 핵심은 미국은 중국에 달러와 지식을 팔고 중국은 미국에 일반 소비상품을 판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과 주류 언론은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비난하지만, 사실 그것은 미국이 그만큼의 달러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달러는 미국이 독점 생산·유통하는 일종의 결제수단 상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기술·지식 거래에서는 오히려 수백 억 달러의 흑자를 얻고 있다. 정리하면, 미국은 중국에 자본과 기술을 주고 중국은 이를 받아 상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다.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중국은 다시 미 국채에 투자해 미국으로 환류시킨다. 미 소비시장을 부양시켜 자국의 수출을 진작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성장한 것은 바로 이 구조에 누구보다 충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중 경제관계의 '결별(decoupling)'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지만, 40여 년 넘게 구조화된 미중 경제관계가 단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는 트럼프의 말과 실제로는 구분돼야 하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발동한

---

이유도 중국과 결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목적은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통상활동을 공평하게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무역전쟁은 미중 간 결별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재결합(recoupling)'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이 달러와 기술지식에 대한 대미 취약성을 극복한다면, 미중 경제관계는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지금보다 당당하게 미국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도 양국 경제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칭적 관계가 대칭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미중 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자본이 과연 구매력이 더 확장된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중국 자본 역시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질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라는 '야만적 전체 기계'가 종종 그런 위협을 가할지는 모르지만,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본주의 기계는 전체 기계의 반복되는 '신평파'를 냉소로 화답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전쟁할 수 없는 미중관계에 남는 것은 자본의 논리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 역사라는 큰 그림, 그리고 한반도

미중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매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일관되게 경제적 맥락에서 중국에 접근했다. 독립혁명 직후인 1784년 뉴욕항에서 출발한 '중국 황후호'부터 현재 트럼프 정권까지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추구해왔다.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미국의 경제이익이 '공정'하게 보호돼야 함을 반복해 강조해 왔다. 미국에게 지정학적 이익은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국가라도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적으로 독식한다면 미국의 경제이익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태평양 전쟁은 문호개방정책에 정면 도전한 일본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다.

문호개방정책을 수용하면 중국 내 어떠한 정치권력이라도 유화적 태도를 보였던 미국의 행태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이 신해혁명 후 집권한 위안스카이 정권과 이후 장제스 국민당 정권을 제일 먼저 승인한 이유도 동일했다. 그들이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지지를 표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은 1949년 집권한 마오쩌둥 정권과도 전향적 관계를 수립하려 했다. 마오쩌둥도 신생 중국의 발전에는 미국 및 서방 자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에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중국에게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나 일본보다는 태평양 넘어 미국이 훨씬 믿음만한 파트너였다. 미국은 전통적인 원교근공 전략의 최적화된 상대였던 것이다.

---

만약 1949년 미중관계 정상화가 이뤄졌다면, 중국은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 없이 그만큼 일찍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관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련 스탈린에게는 미중관계 정상화는 곧 소련의 지정학적 고립을 의미했기 때문에 미중 양국을 갈라놓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스탈린은 그렇게 한국전쟁을 활용했다. 1949년 봄 김일성의 전쟁계획을 반대했던 스탈린이 1950년 봄에는 왜 전쟁계획을 승인했을까?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그가 악마라도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이면 괜찮다!” 라며 마오쩌둥 정권에 접근하려던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미중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20여 년간 철저히 단절됐다. 그 시간 “달에 갔다 온 미국인이 중국에 다녀온 미국인보다 많았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그러던 미중 양국은 베트남 전쟁과 중소분쟁을 거치면서 이익균형을 이뤄 결국 관계 정상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후 중국은 문호개방정책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은 제도적으로도 2001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국이 되었다.

물론, 세상 무엇이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중국 역시 외향적 경제성장은 했지만, 그만큼 미 달러와 기술지식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됐다. 최대 외환 보유국 중국이 그 자산 대부분을 달러화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달러 경제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반증한다. 중국이 현재 이러한 대미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행태다. 타국에 의존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영원히 추구할 국가는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를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국제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동등한’ 상대가 되려는 것을 환영할 리는 없다.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태는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곧 미중관계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할 합리적 이유는 미국에게도 또 중국에게도 없다. 타이완 문제나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대립 양상 역시 실제 전쟁과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립은 전쟁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통상로 확보나 역내 국가에 대한 신용 확보라는 ‘지경학’ 맥락과 보다 밀접히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은 자본주의 국제질서 ‘안’에서의 경쟁이지 그 질서 자체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한반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미 대 친중 논쟁은 미중 패권 경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미중 양국의 이익은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패권 경쟁이 아닌 카르텔 관계라면 그런 논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국 스스로 활동 반경을 좁히고 그만큼 미중 양국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상황이 그와

---

같았다. 사드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중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미중 양국 모두 상호간 협의는 회피한 채 한국 '만' 을 압박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논리를 강조했고, 중국은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양국은 고공외교를 통해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내에서는 사드배치를 놓고 격렬한 진영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트럼프와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놀랄만한 진전” 이 있었다며 맞장구를 쳤다. 한국은 마치 프로선수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아마추어와 같은 처지였던 것이다.

미중관계가 카르텔이라면, 친중 대 친미 논쟁이라는 ‘자기 파괴적’ 논쟁은 무의미하다. 한국은 미중 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을 바라고, 동일한 맥락에서 한반도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지정학 논리에 갇히기보다는 지정학의 맥락에서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해 국제질서의 안정적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공간이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게토’ 로 남아 있는 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사드와 같은 ‘소극’ 에 계속해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변인인 미중관계를 정확히 독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은 그 소박한 시도다.